

|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경제안보 클러스터 |

| 정성분석팀 12개국 보고서 |

러시아의 경제안보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Seoul National University



러시아의 경제안보

2023.3.27

작성자: 박노벽 대사

러시아의 경제안보 목차

I. 개요	-----	1
II. SWOT 분석	-----	5
1. 강점		
2. 약점		
3. 기회요소		
4. 위협요소		
III. 우리의 대응관련 검토 요소	-----	24
1. 강점 고려		
2. 약점 보완		
3. 기회 포착		
4. 위협 대응		
IV. 여론주도 주요인사	-----	25
1. 개관		
2. 주요인사		

별첨: 개황



러시아의 경제안보

2023.03.27.(월)

박 노벽 전 주러시아대사

I. 개요

1. 핵심내용

러시아의 경제안보는 푸틴대통령의 장기 집권체제하에서 추진된 강대국전략 기반 외교국방정책, 러시아의 경제력과 경제정책, 국제관계와 러시아의 국내여건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다.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탈냉전이후 러시아의 국내외 관계에 대한 충격과 재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러시아의와 국제적 경제 안보상의 변화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안보에 관해 SWOT측면에서 분석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러시아의 강점

- 1) 푸틴대통령의 2000년 집권 이래 강력한 국가권력을 중심으로 정치안정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서구민주주의와 다른, 애국 보수주의와 강대국지위 회복을 내세워 러시아국민들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가통합성을 공고히 해오고 있다.
- 2)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광활한 영토, 원유와 가스를 비롯한 광물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국가주도 자본주의와 에너지자원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이용을 안정적 성장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러시아 정부는 국부기금 운영, 재정안정성과 낮은 수준의 대외부채 등 비교적 견실한 경제기조를 유지해 왔다.
- 3) 한편 크레믈린은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이라고 명명하는 전면적 침공을 개시함에 있어서 특히 2014년 이래 강화해온 군사력, 외교관계의 다변화, 경제력, 국내 통합을 기반으로 구조련권에 대한 영향권 주장을 가지고 경제안보상의 충격을 주고 있다.

나. 러시아의 약점

- 1) 푸틴정권의 장기집권하에 국정운영은 정부정운영, 정치참여과정, 삼권분립, 법치주의 등 측면에서 경직된 권위주의 체제로 변화하였고, 민간주도 경제 구조개혁이나 경제다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 2) 경제적으로 자원의존경제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원자재 가격변화에 취약하다. 국가자본주의에 의한 경제운영에 따라 경쟁제한과 규제, 부패 만연, 민간금융 취약, 외국투자 저하가 발생하고, 기업환경 평가는 침공이후 하락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인구 감소추세와 의료분야의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다.
- 3) 러시아는 전쟁의 여파로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대다수 국가로부터 규탄받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 당하였으며 중앙아시아 등 구 소련권지역에서도 영향력이 약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 러시아의 기회

- 1) 크레믈린은 전쟁지속을 위해 부분 동원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국내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들의 무관심을 유도하며 잠재적 전쟁 반대세력의 국외이탈을 묵인해 왔다. 또한 국내경제운영과 외국기업의 국내활동에 대해 전면적 국유화조치는 자제하며 긴 전쟁에 대한 대비와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 2) 서방의 제재에 대해 러시아는 그동안 추진해 온 탈 달러화, 에너지 수출대상 다변화 등으로 타격과 제재의 효과를 축소시키는 한편, 점령중인 우크라이나지역에 대한 병합고착화를 도모하고 있다.
- 3) 러시아정부는 중국, 인도 등과의 대외협력 다변화와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개도국과의 관계 확대를 추구하여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러시아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또는 호의적 국가들은 늘어나가려 하고 있다.

라. 러시아에 대한 위협과 러시아로 인한 위협

- 1)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외교적 타협에 기반한 해결이 어려워짐에 따라 러시아는 점차 서방과 외교 및 경제 관계의 분리가 심화되고 있다.
- 2) 러시아와 서방간 상호제재확대는 세계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에너지와 식



량공급에 차질을 가져오면서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촉발 요인이 되어 경제안보상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 3) 러시아는 자국관점에서 경제안보를 위해 주권수호와 자립경제, 서방대체 공급망 확보를 추구함으로써 단기적인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경제구조개혁과 기술발전이 지체되고 군비경쟁하에 러시아의 경제 및 재정에 대한 압박은 장기적으로 러시아 경제안보의 질적 개선에 어려움과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마. 우리의 경제안보 관련

- 1) 서방과 러시아의 상호 경제제재로 러시아의 자원공급과 경제안보관련 제반 협력이 중단되거나 제한됨에 따라, 경제안보상 리스크가 증대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현재 러시아산 경제자원 수입액의 양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체지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로 인한 충격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전쟁의 여파가 지속되어 국제관계의 분절화가 심화되는 경우 경제안보에 대해 장기적인 변화와 도전이 제기될 것이다
- 2) 러시아가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 안보상황의 변화와 관련하여 경제안보에 부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2. 러시아정부의 경제안보전략

가. 러시아정부는 국제경제상황이 유동적이고 서방과의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 안보'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돈바스분쟁 야기로 인해 서방의 제한된 경제제재가 부과되자, 러시아는 경제안보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기조를 반영하는 안보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정부는 2017년 5월 '2030년 러시아 연방 경제 안보 전략'에 관한 지침 문서를 채택하여 러시아정부는 경제안보를 “외부와 내부 위협에 대한 방어에 의해 국가 주권의 보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서방의 제재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 더



넓은 요인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경험했던 경제성장 부진의 극복과 자원 수출형 경제의 탈피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나. 러시아정부는 2021년 7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대통령령)에서 경제안보전략을 포함시켜 다루고 있다. 주요 핵심내용은 국가의 규제감독역할강화, 자원부국으로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금융분야에서 달러화 의존 감축, 기술력발전 등을 강조하고 있다



II. SWOT 분석

1. 강점

가. 정치적 측면

1) 대통령 주도의 정치안정과 국가통합성 유지

푸틴 대통령은 2000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집권해 온 이래, 지난 23년간 러시아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쳐왔다. 푸틴 대통령은, 1990년대 열린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발생했던 정치사회적 혼란과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정치안정과 질서확립, 국제적 위상 만회, 경제발전의 성과를 보여주면서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지도자로서 지지를 받아왔다. 푸틴 대통령과 그의 주변 정보부서 및 군 출신 지도부는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한 명분하에, 국가의 통합적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크레믈린은 특히 2020년 개헌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경우, 3선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향후 2회 집권이 가능토록 함에 따라, 2024년 당선 후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후계자 구도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앴다.

2)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에 대한 통일된 국내입장 유지

푸틴 대통령은 2022년 2월 24일 전쟁이 아닌 ‘특별군사작전’으로 지칭한 우크라이나 침공개시전후로 나토에 의한 장래 안보위협과 러시아의 역사적, 정신적 영토로서의 우크라이나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러시아 정부와 의회는 전쟁관련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언론과 시위 등 집회를 처벌하도록 하는 근거를 형법과 행정법에 포함시키는 개정을 하였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전쟁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이나 활동을 통제하여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통일된 입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도전이나 사회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3) 푸틴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 유지 및 강화

- 크렘린은 러시아의 전통과 역사적 경험에 기반하여 국가지도자와 정부 주도로 정치가 운영되는 관리민주주의(managed democracy)에 입각하여 애국적 보수주의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정치적 통합을 추진해 왔다.
- 러시아내 여론 조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 푸틴 지지도는 대체로 60% 선의 지지도를 유지해 왔다. 지지도의 변화 흐름은 주요 조치에 따른 대통령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의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예컨대, 2014년 크림병합 전 푸틴지지율은 60% 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4년 크림병합과 돈바스 분쟁 발생을 계기로 푸틴의 인기는 80%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푸틴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급상승하였다(2021년 61%에서 2023년1월 82%로 지지율 상승). 또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침공)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75% 이상으로 2023년에도 유지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 2022년 10월 우크라이나 영토의 18%에 해당하는 4개 점령 지역을 합병하여 안정화 조치를 취하였고 계속해서 그 이상으로 점령지를 넓혀 향후 정치적 지지명분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나.경제적 측면

1) 풍부한 경제자원 구비

가) 러시아는 지구 전체 육지면적의 약 1/8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 에너지와 광물 등 천연자원보유, 기술력 등을 통해 세계경제안보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러시아는 2021년 세계경제에서 원유(미국, 사우디 다음으로 세계 생산 3위), 가스(생산 세계 2위), 원자력 등 주요 에너지보유, 곡물의 생산국 및 수출국으로서 강점을 갖고 있다.

나) 러시아는 202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명목 GDP 순위가 11 번째이나, 실



질 구매력지수(PPP)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를 차지한다. 한편, 2021년 세계 총생산량의 1.7%를 점유하여, 글로벌 가치 사슬에 약하게 통합된 상태이므로, 외부 제재 등 충격시 기본적인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여 비교적 어려움이 적은 편이다.

다) 또한 러시아는 철과 강철, 알루미늄을 포함한 많은 금속 및 광물의 중요한 생산국으로서 백금, 팔라듐, 니켈, 네온, 티타늄, 금 및 보석을 수출한다.

라) 러시아는 방산분야에서 주요 무기 수출국이다.

마) 러시아는 농업 부문에서 보리, 밀, 옥수수의 주요 생산국이며 수출국이다. 러시아는 2021년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밀 24%, 보리 14%, 해바라기 기름 23%를 공급했다.(우크라이나는 밀의 10%, 보리의 13%, 해바라기 기름의 50% 이상을 공급)

2) 에너지 자원의 국가전략적 활용

가)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으로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가장 중요하다.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은 러시아의 총 상품 수출액 절반 가치 이상이며, 정부의 예산 수입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나) 러시아정부는 에너지자원의 국가전략적 활용정책을 추진해 왔다. 즉, 러시아정부는 국가 경쟁력 확보와 국가자원 보호를 위해 원유 및 가스개발 및 이용에 관해서 민영화보다는 국영기업을 통한 국가 자원의 통제와 이용이 국익에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경제 현대화를 목표로 풍부한 천연자원을 개발해 오고 있다. 즉, 가스프롬, 로스네프트 등 에너지 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분을 증가시켜 자본력을 강화한 후 자원개발 뿐만 아니라 수출용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에너지 소비국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비국들의 가스유통시장 접근성 획득, 에너지 의존 주변국들에 대한 가격인상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다) 가스 및 원유 수송관(파이프라인)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

유럽으로의 가스원유관을 통한 수출이 축소 또는 중단되고 있는데 대신하여 중국과 연결된 ‘시베리아의 힘(Power of Siberia: 26백만톤/연)’이라는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를 활용하며 야말 LNG 공장(16백만톤), 사할



린 LNG 공장(10백만톤)을 구축하여 수출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3) 경제정책과 전략

러시아 정부는 자국경제 발전과 주권보호라는 두 가지 국가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서방의 자유주의적 시장기반에 의한 경제운영을 거부하고 ‘국가주도 자본주의’ 정책기조 하에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즉, 러시아정부는 사유재산기반 시장경제원칙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안정성이라는 명분하에 제한된 시장경제모델을 유지해 왔다. 러시아는 상기 전략에 따라 2000년대 이래 정치안정과 유가상승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거시경제의 안정과 발전, 국민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하여 강대국의 역량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2014년 크림병합에 따른 제재로 경제성장률이 2015년 -2%, 코로나로 인해 2020년 -2.7%,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제재로 2022년은 -2.2%~-2.5%로 각각 경제위축을 경험하였지만, 그 외 기간에는 러시아는 국민총생산(GDP) 및 일인당 국민소득증대, 재정안정성 강화, 국부펀드 증대 등을 달성하며 위기 극복기반을 마련하였다.

4) 금융분야

가)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처 등의 금융안정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22년 강력한 금융제재 하에서도 중앙은행의 신속한 대응은 러시아 경제의 타격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

나) 재정안정성과 대외채무관리

2010년 이래 10여 년 동안 러시아는 정기적으로 예산운영시 일관된 긴축기조를 고수하여 해외채권에 대한 국가 부채를 크게 줄일 수 있게 하였다. IMF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외채는 2023년1월 현재 3,818억불로 전년 대비(4,802억불)보다 20% 감소하였다. 다만, 이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민간 부채나 러시아 순자본의 해외유출 추이와는 별도로이다.

다) 자체결제시스템인 미르(MIR) 도입(2015년)으로 외국통화기반 지불서비스 차단시 대응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며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등 20여개 은행과 연계 운영하고 있다



라) 서방제재의 단기적 충격완화

러시아정부는 2022년 초 서방의 광범위한 제재로 인해 경제타격이 우려되었으나, 에너지에 의한 경상수지확대와 금리조정, 물가 및 민생안정조치, 환율방어 등 국내경제정책으로 4월부터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 불황을 최소화했다.

5) 국부 기금(National Wealth Fund)조성과 외환보유고의 제한적 활용

가) 러시아정부는 2008년 이래 석유·가스수출세를 기반으로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여 국부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금의 규모는 2022년 1,980억불에서 2023년 1월 현재 1,484억불 (GDP 7.8%)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나)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화자산인 동 기금을 외환보유고의 일부로 간주하여 중앙은행 계좌에 예치해 왔다. 한편,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약 6,650억불)중 해외계좌에 보유 중이던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보유고가 동결되자 상기 국부기금중 가용한 일부(93억불)를 재정안정을 위해 투입하였다.

6) 원전의 국제적 진출

상업용 원자로에 사용되는 우라늄연료와 관련, 러시아는 2020년 전 세계 우라늄 전환의 40%, 2018년에는 전 세계 우라늄 농축 능력의 46%를 보유하고 농축 우라늄 소요량의 35%(약 10억불)를 제공해 왔다. 특히 5~20%인 저농축 우라늄(HALEU) 연료는 러시아(TVEL Fuel Company)에 의해 상업적으로 공급되어 왔다. 미국은 2022년 원자력관련 러시아 회사인 로사톰에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저농축 등 핵연료공급망에서 러시아산을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다. 반서방연대의 다극체제 지향하에 강대국 외교추구

1) 푸틴 대통령 하에서 러시아의 외교안보정책은 두 가지 기조 하에 추진되어 왔다.

첫째는 구 소련지역 등 유라시아에서 정치경제적 중심으로 러시아를 재건



하며, 나토와 유럽연합(EU)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등 일부 구 소련지역 국가들과 유라시아경제연합 등 군사·경제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패권국 지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둘째는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강대국으로서 지위를 가지는 다극체제를 구축하고 반미연대구축 기치 하에 중국, 인도, 이란 등과 협력하는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이르는 반서방 노선의 국가들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브릭스(BRICS) 회의체,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국가 등이 참석하는 상하이협력기구와 같은 반서방 정치협의체에 활발하게 참여해 왔다

- 2) 러시아는 2000년 푸틴 대통령의 집권 이래 남북한관계에 대해 등거리 외교노선을 취하면서 동북아에서 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안보체제 도입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우리나라와의 실질협력관계 확대를 중시해 왔다

라. 군사력 강화

- 1) 러시아는 연간 국방예산을 600억내지 650억불(GDP대비 4%)을 지출하고 있으며, PPP(실질구매력)반영시 더 큰 규모로서 군사비 지출면에서 세계 5대국중 하나이다. 핵무기 보유면에서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말 현재 러시아의 평시 총 병력은 약95만 명이나, 앞으로 150만 명 수준으로 증가시킬 예정이다.
- 2) 크렘린은 2000년대 이래 경제회복과 2011년 이래 국방현대화 추진으로 축적된 군사력을 사용하여 대외관계에서 러시아의 발언권과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여 국제문제에 대해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으로서 지위를 갖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2008년 조지아전쟁, 2014년 크림반도병합과 돈바스 분쟁 야기, 2015년 시리아 내전 개입,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구 소련권과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나토의 동진 확장을 거부해 왔다.



마. 사회 문화적 측면

- 1) 러시아인들은 우주 탐사, 원자력 에너지, 수학, 물리학, 화학 및 의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노벨상 수상자(27명)중 약 70%가 과학과 의학 분야에서 배출되었다. 또한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예술, 문학적으로 클래식 음악, 오페라, 발레, 회화, 건축, 문학을 통해 소프트파워 역량을 발휘해 왔다.
- 2) 러시아 국민들은 1·2차 세계대전, 혁명, 체제변혁 등 위기를 거치면서 급변하는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대한 회복력과 적응력을 발휘해 왔다. 2차 대전의 승리를 기념하는 대조국전쟁 승전일(5월 9일), 조국 수호의 날(2월 23일) 또는 러시아의 수립일(6월 12일)과 같은 국가 정체성과 업적에 대한 애국심과 자부심을 강하게 갖고 있다.

2. 약점

가. 정치적 권위주의에 따른 경직성과 통제강화

푸틴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따라 러시아의 국정운영체제는 정부운영, 법치주의 면에서 다음과 같이 권위주의로 변모하였다.

첫째, 국가체제운영이 상명하달 방식에 따라 전반적으로 경직성과 통제 하에 운영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있어 폐쇄적이고 정치활동에 대한 통제적인 조치들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정치과정 관련, 선거제도나 투표과정은 명목상 민주적이고 자유로워 보이나, 여러 선거에서는 야당 후보나 정당 등록, 선거활동에 어려움을 주어 왔고 선거운동시 국영 TV의 편향된 보도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등이 행해지고 있다. 또한 2020년 6-7월간 코로나 발생기간 중에 실시한 헌법개정시 투표소외 장소 인정 등 특별 투표지침하에서 독립적인 감독이 상당수 부재한 채 진행되었다

셋째,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 원칙은 헌법상 존재하나 사실상 행정부에 의해 통제된다. 크렘린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의회에서 중요 법률이 채택되기 어렵다.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은 2016년 총선 이후 의회

의석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타 정당들은 ‘조직적 야당’으로서 중요정책에 대해 거의 만장일치로 정부의 공식 노선을 지지해 왔다

넷째, 사법부의 독립성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지만, 정치적 의미를 가진 재판에 대해서 크레믈린의 압박과 지침을 최대한 반영하여 판결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부패와 관련, 정부부처, 입법부, 기업, 의료, 군대 등에 부패행위가 만연하여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크레믈린 등 정치 지도부는 수년간 부패를 국가의 올바른 기능에 대한 핵심 도전으로 간주하고 반부패 노력을 하고 있으나 대체로 상징적이고 일관성이 없다. 검찰총장실 발표에 따르면 2018년 1,3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부패에 연루되어 해임되었다고 했다.

나. 경제적 측면

1) 에너지자원 의존경제

가) 정부주도경제와 민간 주도 개혁미비

러시아정부 및 국영기업이 에너지 등 주요산업을 지배하는 한편, 정부재정의 40%를 원유·가스에너지 수출에 의존해 오며 따라 원자재가격의 극심한 등락에 따라 정부재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한 산업 다각화 개혁정책은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나) 안정적 수출처인 유럽과 관계차단 및 거래선 상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제재로 유럽으로 수출이 중단되어 안정적 가스 수출선을 상실하였으며, 특히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해상 가스관인 노르드 스트림 2(Nord Stream 2) 해저가스관도 사실상 폐기되고,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관의 이용도 감축되고 있어 에너지수출 인프라 이용에 타격을 받고 있다.

다) 원유·가스 생산시설의 노후화와 신규투자 및 기술부족

기존 에너지 생산시설의 노후화를 개선할 재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해상(off-shore) 원유를 개발할 기술력과 정제공장의 확장투자 확보가 어렵다.



2) 경쟁제한과 규제확대

가) 사유재산권 보장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제도상 법률시행상 결함이 많고,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개입에 대해 적절한 보호가 불충분하다 (2020년 재산권보호에 관한 국제적 순위 129개국 중 88위)

나) 소수의 대기업이나 국영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어 경쟁이 어렵다. 2000년 이후, 에너지 부문에서의 국영 자산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IMF에 따르면, 현재 국영기업이 러시아 경제의 71%를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2006년의 38% 점유율의 거의 두 배이다. 중소기업의 비율은 16%에 불과하며 이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3) 금융분야

가) 국영은행 주도와 민간은행 취약

러시아의 은행권은 국영은행이 주도하며 민간은행은 취약한 상태여서 금융중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의 규제 기준에 관해 국제기준의 도입은 당초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경제위기시에는 국가 지원이 러시아 은행 시스템의 부실채권 문제 대처에 도움을 주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부실채권은 2017년 전체 총 대출의 10%를 차지했다. 러시아의 은행 수는 급감하여 2014년 12월 은행이 842개였으나 2019년 1월 현재 149개 은행이 면허를 보유, 운영 중이었다.

나) 국제 투자 유치 저조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사태 이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외국인의 직접 투자 감소를 겪고 있다

첫째, 미국 및 유럽연합의 2014년 금융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제재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러시아의 대응 제재가 주 요인이다.

둘째, 러시아는 60여개 국가들과 양국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지만 이는 투자확대를 가져오지 못했다. 러시아는 풍부한 천연 자원, 교육받은 노동력 및 소비인구 규모 등 긍정적 요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분야에서 국가의 역할 강화, 높은 세율(2019년 기업 이익금의 46%),

부패, 규제 불투명성 및 사유재산권 보호 미비 및 지역 불안정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외국인 직접 투자의 세계적 감소추세와 2019년 코로나 대유행으로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2020년에 급락하여 4,470억 달러에 머물렀으며 이는 전세계투자액의 약 1% 수준이었다.

다섯째, 해외로의 러시아 자본이탈이 발생하였고,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인의 자산이 동결되어 있다

2020년 중앙은행이 파악한 순자본유출 액수가 478억불 (2019년 221억불의 두배)을 초과하고 있다고 보이며 2022년 제재 하에 있는 민간기업인들의 자산(300억불이상)이 동결되었다

다) 위안화 의존도 증가

2022년 국부기금의 40%를 위안화로 충당하고 있고, 주식시장의 거래 33%를 위안화로 허용하고 있다

4) 기업활동 여건 평가

러시아는 82개국에 대한 비즈니스환경 평가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전 59위에서 침공 후 75위로 세계 순위에서 16계단 하락했다. 낮은 순위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감독 증가, 장기적인 경제 전망 불투명 상태와 세계적 고립을 반영하고 있다.

5) 전쟁의 영향으로 군수산업 가동과 부분 동원 경제운영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경제운영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여 부분적 동원경제체제를 갖추기 위해 총리주재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는 세금을 인상하고 경제 분야에서 특별 조치를 도입하여 방산물자생산 주력 등 국방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집중하는 경제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다. 나토의 동진 저지 및 다극화 외교의 한계



러시아의 외교 정책은 세력균형 상태에서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를 강화하는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다. 크렘린은 구 소련권 국가 지역을 러시아안보를 위한 영향권으로 간주하여, 2008년 이래 미국이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는 선언에 대해 크게 반발해 왔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가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초기 단계에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친서방화 가속화와 나토회원국 확대를 초래했다. 또한, 전쟁여파로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아르메니아 등 코카서스 지역 국가들도 자국의 독립 유지를 위해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러시아의 역할을 줄이기 위해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어서 구 소련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러시아는 위상 약화를 겪고 있다.

또한, 국제여론의 단면을 보여주듯이 2022년 및 2023년 유엔총회에서 러시아의 '영토와 주권존중'과 같은 유엔헌장 원칙 위반, 무력행사 중단 및 철군 요구에 관한 결의안 채택시 140 여개 국이 찬성, 러시아를 규탄하였다. 다만, 40 여개 국가는 기권 또는 반대했다.

라. 군사력의 성과 부진

러시아군은 예상과 달리, 2022년 동안 우크라이나 침공시 부진한 성과를 보여 왔다. 이는 러시아의 재래식 군사력이 가진 약점과 도전과제를 반영하였다. 즉, 일차 분석에 따르면, 특히 병참의 마비, 성능이 저급한 군 장비와 군대의 낮은 사기, 열악한 통신수단, 군 지휘 명령체제의 혼선, 작전수행의 경직성, 공군력의 취약성, 순항 및 탄도 미사일의 부족 등 여러 취약점들이 드러났다.

마. 사회문화적 측면

1) 출생율 저하와 인구감소

UN 예측에 따르면 러시아 인구는 2022년 1억 4,275만 명에서 2050년까지 약 1억 3,86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2014년에 병합한 크림반도 인구 포함) 러시아 인구 감소추세 이유는 낮은 출생률(여성 1명 당 1.5명)과 높은 사망률, 보건의료체제 취약성 증대 때문이다.

2) 생산 노동력 감소



러시아내 생산과 노동 가용 인구는 전체 인구보다 훨씬 더 빨리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서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2년 9월 부분 동원령 발동을 회피하기 위해 40~60만 명에 가까운 젊은 인력층이 이탈하여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노동력 부족을 촉발하고 있다.

3. 기회요소

가. 부분 동원 전략

크레믈린은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과정에서 부분 동원전략을 추구하면서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탄압보다는 다소 불완전한 통제 하에 국민들의 우려 확산을 억제시켜 안정을 우선시하고, 국내 경제적으로 산업 전체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국유화를 자제하면서 향후 선택여지를 두고 있다.

나. 경제제재의 충격 완화

1) 경제충격완화

러시아 경제는 2022년초 서방 경제제재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23년초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제한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요 인원은 러시아가 고유가, 중국 및 인도와 같은 대체교역국 확보 등으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를 확보하고 러시아 정부 및 중앙은행의 선제적인 국내경제 조치를 취한 결과이며 이로써, 제재충격을 일단 완화시켰다.

2) 금융

가) 탈 달러화

러시아 정부는 2014년 서방의 제재를 계기로 러시아 경제에 대한 충격을 피하기 위해 탈 달러화를 추진했다. 러시아는 두 가지 영역에서 탈 달러화를 적극 실행하고 있다.

첫째, 러시아 정부는 자신의 달러 보유를 줄였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2013년과 2020년 사이에 달러로 표시된 외화준비금의 비중을 절반 이상 줄였고, 2021년 7월 러시아 재무장관은 완전한 달러화 제로 계획을 발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국부펀드 달러표시 자산은 1,860억 달러로 기금의 약 1/3로 감소시키는데 그쳤다.

둘째, 러시아는 달러로 거래하는 무역의 점유율을 감소시켰다. 정부는 중국, 인도, 터키 및 기타 유라시아 경제 연합(아르메니아, 벨로루스,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다양한 논의 및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간 무역에서 러시아 통화나 해당국가 통화 사용을 우선시했다. 러시아의 주요 국영 에너지 회사들도 가능한 경우 유로화나 루블화로 거래를 했다.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 무역에서 통화사용 구성을 변화시켰다. 2020년 4분기에 러시아의 브릭스 국가(브라질, 인도, 중국 및 남아공)에 대한 수출의 약 10%만이 달러로 결제되었고 이는 2013년 달러결제 비율 약 95%에서 대폭 감소한 것이었다. 그러나 러시아 총 수출의 약 절반은 여전히 달러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에너지분야의 대체수출처 확보

가) 2022년도 기존송유관을 통한 원유 수출지속

-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2022년 러시아 원유의 유럽 수출량은 3,590만 톤 유지, 전년(3,840만 톤) 대비 7% 감소했다.
- 드루즈바 송유관 북부지선은 벨라루스-폴란드-독일로 향하고, 남부지선은 우크라이나·슬로바키아·체코·헝가리와 연결되는데, 유럽연합의 제6차 대러 제재 시에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의 반대로 송유관을 통해 육로로 유입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독일과 폴란드는 수혜를 거부하고 원유 금수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부분가동(2022.5.)했다.
- 2022년도 송유관을 통한 러시아의 對중국 공급량은 4,000만 톤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나) 러시아산 가스도입에 대한 유럽의 단계적 중단

유럽의 경우,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단시일 내에 철폐할 수 없어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자 하며 유럽과의 천연가스 무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Gazprombank에 대해서는 거래중단의 예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랄유를 할인가로 중국, 인도 등지로 수출하여 재정수입 원으로 보충해 오고 있다.

다) 중국, 인도 등 아시아지역 가스도입국가들에 의한 가스수요 증가

- 가스수요 증가시, 북극 가스전과 사할린 가스전 개발, 러중간 신규 가스관 건설 추진, 캄차트카 LNG 공장 건설시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

4) 농산물 수출

- 농산물과 비료수출을 위해 2022년 7월 튀르키예와 유엔의 중재 하에 흑해를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1,100만톤 (옥수수450만톤, 밀 320만톤 포함) 과 비료를 수출하는 데 합의하여 시행해 왔다. 러시아는 아프리카 등에 대한 식량부족 영향을 서방비난의 근거로 삼기 위해 상기 합의에 대해 4개월(120일) 연장하며 유지하고 있다.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식량과 비료의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에, 전쟁은 전 세계 식품가격의 상승을 가져왔다. 전쟁 지속으로 인한 파종 및 수확의 중단과 러시아의 흑해 경유 곡물 수출 봉쇄시 특히 개발도상국에 기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아프리카의 85%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밀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다. 러시아에 대한 우호국가의 증가를 위한 국제협력의 다변화추구

러시아는 서방과의 대결정책의 일환으로 중국, 인도, 브라질, 이란 등 개도국들과의 관계를 다변화하여 러시아의 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풍부한 에너지와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호혜적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쟁에 대해 중립적인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에게 과거 서방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서방의 제재가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 정보를 확산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2015년 일부 구 소련국가들과 발족시킨 유라시아경제연합(EAEU)를 발전시켜 지역내 경제운용주도권을 유지해 왔다. 즉, 유라시아경제연합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간의 관세동맹을 기초로 출발하여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을 추가 회원국으로 가입시켜, 러시아의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라. 군사적으로 확보한 합병지역 고착화 가능성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영토 18%에 해당하는 4개 점령지역에 대한 합병을 2022년 10월 발표한 후 이를 고수하며 더 확장하고자 한다.

마. 전쟁종료 이후의 중장기적 고려분야

러시아 정부가 전쟁 전 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 시도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의 대폭 변화로 서방의 제재 완화시, 장기적으로 고려할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는 자원의존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업다각화와 혁신기술개발을 촉진해 왔으나 본격적인 추진은 미루어져 왔다. 새로운 선진 과학역량의 강화와 발굴에 기여하는 대규모 투자 및 혁신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하이테크 산업을 창출하며, 경제의 새로운 부문, 유망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보장하고, 기업 및 인프라의 현대화, 디지털화, 인공 지능 기술의 사용, 하이테크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제안보와 국가안보의 토대를 마련해 나갈 수 있다.

둘째, 러시아정부는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등 외국투자와 혁신기술 육성정책을 추진해 왔다.

세째, 러시아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화석연료 감축 추세에 대비하여, 원유, 가스 등 자원의존형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해 왔다. 특히 천연가스를 활용한 수소경제 개발시 협력해 나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4. 위협요소

가. 전쟁의 여파로 인한 국내정치적 변화와 국민의 불만표출 가능성

2022년 9월 크레믈린이 추진한 30만명 부분 동원령 이후 러시아 국민들은



전쟁 추이에 대해 관심이 커져 우려와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젊은 층들이동원령을 피하여 상당수 러시아를 떠났다. 이를 감안할 때, 향후 전쟁과정에서 인적·물적 손실이 커지는 경우, 국내정치적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가 2023년 3월 푸틴대통령을 전쟁범죄 행위로 기소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푸틴이 국제적 지도자라는 국내에서의 위상에 손상을 주고 있다.

나. 경제적 영향

1) 서방의 제재와 러시아의 대응제재로 상호관계 단절

서방의 포괄적인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러시아의 경제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대러 제재를 주도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비우호국으로 분류하여 대응제재를 취하였다. 상호제재는 러시아와의 교류를 중단시키면서, 해당 국가들이 무역, 투자로 얻어온 경제적 이득과 경제안보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대러 제재와 대응제재는 결과적으로 불가피하게 러시아의 경제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경제안보에 상호 위협을 주고 있다.

2) 서방의 제재

가) 무역분야에서 수출 통제,

첫째, 서방은 러시아산 원유 또는 가스의 수입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하여 수입원에 대해 차단중이다. 즉 미국과 G7, EU, 호주는 2022년 12월 초 해상 운송을 통한 러시아산 석유를 배럴당 60불 이상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인 가격상한제를 실시하였다.

둘째, 2023년 2월 석유와 석유가공제품에 대해서도 가격상한제를 도입하여 러시아산 원유, 원유가공제품의 수입원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셋째, EU는 러시아로부터의 석탄, 철강, 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나) 기술, 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

미국은 수출 통제를 확대하여 러시아 및 벨라루스가 수입하는 다양한 물품 중 미 상무부 통제목록에 포함된 미국의 기술, 장비, 소프트웨어를 사



용하는 경우, 이러한 무역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하는 해외직접 생산규칙을 도입하였다. 특히 러시아의 군사기관이 최종 사용자인 경우에 이러한 품목의 수출은 불허토록 하였다. 이러한 수출통제 조치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수용하여 유사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치로 인해 러시아는 서방의 부품조달에 있어 큰 제약을 받아 정밀무기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

다) 금융분야

- 러 중앙은행의 외화보유고중 달러 및 유러화 표시 자금(약 6,650억 달러 중 약 절반)동결, 1,200명 이상의 개인과 거의 120개 회사의 자산 동결, 글로벌 결제 시스템인 SWIFT에서 러시아 중앙은행 등 주요 러시아 은행 퇴출을 포함하고 있다
- 러시아의 자체 결제시스템(SPFS) 또는 중국 결제시스템(CIPS)을 활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된다거나 무역 등 거래에 활용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라) 인적 제재

-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개인과 측근, 가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여 입국 제한 및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였다. 2014년 크림반도 침공 시에도 유사한 제재를 내린바 있으나 푸틴대통령과 가족을 포함하여 고위정부인사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며 2022년 6월에는 그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 제3국 기업은 제재 대상 개인 및 단체와의 거래시 2차 제재 즉, 행정적 벌금, 형사적 기소의 위험을 받을 수 있다.

3) 러시아의 주요 대응제재

- 가) 크레믈린은 2022년 3월 대외 무역 정책에 일련의 "특별 경제 조치"에 관한 법을 도입하여 러시아와의 특정 제조 제품 및 원자재 무역에 대한



제한 또는 전면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러시아 정부는 ‘비우호적’ 국가로 지정한 50여개 국가(우리나라 포함)에 대해 선별적으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 나) 크레믈린은 2022년 3월 러시아 민법의 강제 라이선스 조항을 수정했다. 이것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도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 디자인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지정된 ‘비우호적’ 국가의 권리 보유자는 그러한 사용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 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2022년 5월 러시아산 천연가스 구매에 루블 이외의 외화 지급을 금지시켰다.

앞으로, 러시아와 서방 국가간에는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상호 제재는 계속 유지 또는 강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원자재 교역과 공급, 서방의 투자와 기술협력의 단절은 상당기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자원 공급망 차질과 가격 상승초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화석에너지, 식량, 비료 생산과 공급에 차질을 일으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가격상승을 겪게 하였다. 한편, 유럽은 러시아 가스 및 원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여 역설적으로 탄화수소 사용을 절감하게 하였다.

한편, 러시아 입장에서는 2022년 중 단기적인 화석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쟁 전인 2021년 보다 28% 더 많은 수익을 얻었다.

5) 에너지자원분야 : 공급경쟁과 에너지수요 감소가능성

가스공급에 대해, 미국, 중동, 아프리카 등지의 가스 수출국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으며, 러시아는 중국, 인도 등지로 원유를 수출하고 있으나 국제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오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화석연료수요 감소추세가 증가하고, 원유·가스의 공급과잉의 주기적 변화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러시아의 화석연료 수출을 통한 자원확보는 부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국제적 대결구도 형성과 전쟁의 외교적 해결의 전망 불투명

- 1) 중국 등 다극체제 지향하는 수정주의 국가 연대 강화와 한계
 - 중국은 서방의 제재조치 준수면에서 미국과 유럽시장의 중요성에 더 비중을 두면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전쟁과정에서 간접적 무기부품 지원을 검토한 것으로 2023년 알려져 있어 향후 향배가 중요하다. 또한, 러시아는 대만문제, 경제기술, 지역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간 대립이 고조되는 경우, 이를 활용하고, 외교관계 확대 대상을 인도 등 아시아권, 이란 등 중동이나 아프리카 개도국으로 확대하여 이들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 러시아는 중국과의 경제력 격차 등으로 인해 중국과의 협력상에 불리한 점도 있다.
- 2)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목표를 합병한 영토의 정복에 국한하지 않고 키이우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를 교체하여 통제 하에 두려고 한다. 크렘린은 2023년 현재 국내정치적 통제 하에 단합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버텨나갈 수 있다고 보고 오히려 서방의 연대가 흐트러지거나 지원이 감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과 서방과의 근본적인 대립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

라. 군사적 측면

- 1) 전쟁은 장기적인 갈등상태 지속으로 양측간 대립과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쟁과 대립의 장기화는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경제안보 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들의 경제안보에 대해 부정적 위협의 요인이 되고 있다.
- 2) 러시아는 미국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2023년 2월 21일 New Start(신 전략핵무기감축협정) 이행중단을 선언하였고, 전술핵 사용가능성에 대해서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 3) 우발적 대결 확산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미래 양측 간의 소통유지가 중요하다. 2023년 3월 14에는 러시아전투기의 미국 무인기 격추로 양측간 직



접 대결 위험성도 보여주었다.

III. 우리의 대응에 관한 검토 요소

2023년 초 시점에서 볼 때, 푸틴대통령 체제하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및 서방과의 대립을 지속하여, 분쟁이 다양한 형태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로 인해 러시아와 국제적 차원에서 경제안보상의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 향후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의 정치적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제안보와 관련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강점 고려

가. 푸틴 대통령하의 러시아 정부는 남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등거리외교를 추진하면서도 우리와의 실질협력관계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계기로 우리정부가 대러 제재에 동참함에 따라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비우호국가군에 포함시켰다. 다만, 러시아는 자국에 비우호적인 국가의 기업을 대상으로 내린 구체적인 ‘특별경제조치’(5.3)발표시 한국기업을 제외시킴으로써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도록 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기대를 보이고 있다.

나. 한편,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북핵 등 안보문제와 극동 등지의 협력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2. 약점 보완

가. 러시아에 대한 상호제재 지속시 한국의 경제안보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에 상당한 제약은 불가피하다.

나. 우리나라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은 전체 원유의 5.6%, 액화천연가스(LNG)는 6.2% 수준이다.

3. 기회 포착



가. 한러간 관계에 대해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변화 가능성을 감안해 볼 수 있다.

나. 기후변화 대응차원에서 대체 에너지인 수소 생산과 도입에 관해 협력의 가능성이 있다.

4. 위협 대응

가. 우리는 대러제재 동참에 따른 경제안보상의 단기적 영향에 대해 대체방안을 마련하여 충격을 완화하고 있으나, 여타 요인에 의해 간접적으로 경제안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나. 향후 전쟁장기화 또는 러시아와 서방간 대결 완화가가능성 등 다양한 변화 여하에 따라 우리의 경제안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IV. 여론주도 주요인사

<<배경>>

2022년 전쟁 전에는 러시아에서 언론계나 학계 인사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정부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고, 서방언론의 현지보도 활동도 대체로 자유롭게 허용되었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정부와 의회는 2022년 3월 형법과 행정법을 개정하여 이번 전쟁관련 러시아 정부의 활동에 관한 허위정보와 비판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15년 징역형 처벌과 상당한 벌금(70만 루블에서 5백만 루블)을 부과하여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발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정부는 전쟁에 반대하거나 비판, 항의하는 것을 금지하며 언론보도시 정부와 일치된 입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러시아내 주도적인 여론은 정부인사와 관련 지지인사들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주요인사>>



1.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 대통령 (1952년생)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법대 졸업후 소련당시 정보기관인 KGB(1975-90)근무, 상트페테르부르크 부시장(1990~96), 크레믈린행정실 부실장, 연방보안부(FSB) 부장, 총리를 거쳐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
- 2008년 당시 헌법상 3선 금지조항을 고려, 메드베데프 총리가 대통령(2008-12)직을 맡는 동안, 총리로 활동하다가 2012년과 2018년 대통령으로 이어서 당선(임기 6년)되어 현재까지 재직중
2. 미하일 미슈스틴 (Mikhail Mishustin) 총리(1966년생)
1989년 모스크바 국립기술공과대학 졸업, 1992년 컴퓨터분야 종사, 1998년 국세청차장, 2010~19년 국세청장, 2020년 1월 이래 총리
3.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Valentina Matviyenko) 상원의장(1949년생, 여)
1991~98년 주 몰타 대사, 주 그리스대사, 2003~2011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연임), 2011년 이래 상원의장으로 활동중
4. 바체슬라브 볼로딘(Vyacheslav Volodin) 하원(두마)의장(1964년생)
1985년 사라토프 주의회 부의장, 1999년 하원의원, 2010년 부총리겸 2011년 대통령실 행정부실장, 2016년 이래 하원의장
5. 니콜라이 파트루셰프(Nikolay Patrushev) 안보실장(1951.7.11.생)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선대 졸업 후 1974년 KGB 상트페테르부르크 지부 근무(푸틴과 관계개시), 1998년 옐친 대통령실 부실장, 1999년 8월부터 2008년 5월간 푸틴의 후임으로 연방보안부(FSB: KGB의 후신)부장, 2008년 5월 국가안보실장
6.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Alexandr Bortnikov) 연방보안부(FSB)부장(1951.11.15.생)
1973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철도공업대 졸업후 KGB 근무개시, 2003년 연방보안



부(KGB 후신) 상트페테르부르크 지부장, 2004년 FSB 경제보안담당 부부장후
2008년 FSB 부장

7.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bedev) 안보회의 부의장(1965년생)
1999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법대 조교수, 2000년 대통령 행정실장, 2005년 제1
부총리, 2008~12년 대통령, 2012~19년 총리, 2020년 안보위원회 부서기

8. 세르게이 키리엔코(Sergei Kiriyyenko) 대통령실 부실장(1962년생)
1998.3~8월 총리, 2005~16년 로사톰 사장, 2016년 이래 크레믈린 행정실 제1
부실장

9.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대통령실 대변인(1967년생)
1989년 모스크바 국립대 아시아아프리카학부 졸업, 1990년 터키대사관 근무,
2000년 대통령실 공보비서관, 2004년 대통령실 대변인

10.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외교장관(1950년생)
1972~76 주 스리랑카 대사, 1992년 외교차관, 1994~2004년 주 유엔대사,
2004년 이래 외교장관

11.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igu)국방장관(1955년생)
1977년 크라스노야르스크 공대졸업, 1978년 시베리아 건설회사 근무, 1991년
구조부대장, 1994년 비상사태부장관, 2012년 이래 국방장관

12. 유리 우샤코프(Yuri Ushakov) 외교보좌관(1947년생)
모스크바 국제관계 대학 졸업, 1998~2011년 주미러시아 대사, 2012년 이래
크레믈린 외교보좌관

13. 이고르 세친(Igor Sechin) 로즈네프에너지사 회장(1960년생)
1984년 레닌그라드국립대 경제학 박사, 1994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부시장 비서
실장, 2004~8년 크레믈린행정실 부실장, 2004~11년 로스네프트사 이사회회장,

2008~11 부총리, 2012년 이래 로스네프트 회장

14. 엘비라 나비올리나(Elvira Nabiullina) 중앙은행장(1963년생)

1986년 모스크바 국립대 경제학부 졸업, 1997년 경제개발부 차관, 2007년 경제개발부 장관, 2012.5월~2013.5월 크레믈린 경제보좌관, 2013년 6월 이래 중앙은행장 (쿠즈미노프 고등경제대 총장이 남편)

15. 알렉세이 쿠드린(Alexei Kudrin) 전 재무장관(1960.10.12.생)

1983년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 경제학부졸업, 1993년 상트페테르부르크부시장, 1996년 대통령실 부실장(무역, 경제, 과학담당), 2000년 재무장관, 2007~2011 부총리 겸 재무장관, 2018~ 2022 회계감사원장, 2022.12월 안데스(IT 기업)고문

16. 게나디 주가노프(Gennady Zuganov) 공산당 당수(1944년생)

1993년 이래 공산당 당수 겸 하원의원, 1996년 이래 대선후보로 등록

17. 예브게니 프리고진(Avegeni Progozin) 와그너그룹 대표(1961년생)

2013년 러시아의 민간용병단체인 와그너 그룹 설립 및 대표, 러시아국방, 정보기관과 조율하며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전투지원을 통해 자신과 와그너그룹이 가장 애국적인 전사라는 이미지를 SNS등을 통해 선전하고 국방장관 등을 거세게 비판하여 크레믈린의 견제 강화

18. 람잔 카디로프(Ramzan Kadyrov) 체첸 수반(1976년생)

1999년 체첸대통령 직속 정보국장, 2004년 체첸공화국 부총리, 2006년 체첸 총리, 2007년 체첸 정부수반

19.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Vladimir Solovyov)(1963년생)

국립과학기술대 졸업, 2012년 이래 러시아1TV 등 국영 텔레비전뉴스채널 진행자, 친정부 발언으로 국내여론형성 주도



20. 알렉세이 나발니(Aleksey Navalny) 야당지도자(1976년생)
2000~7년 야블로코 당 활동, 2013년 모스크바시장선거 도전, 2018년 러선관
위, 대선후보활동금지, 2020년 노비촉신경제 중독으로 독일병원 치료차 출국
허용 후 2021년 1월 귀국즉시 체포·복역중(당초 2년6개월 형에서 9년 연장)

21. 미하일 호도르콥브스키(Mikhail Khodorkovsky)(1963년생)
모스크바 멘델레예프 화공대졸업, 1986년 컴퓨터사업 활동, 1990년 메나텡회
사 및 은행설립, 1995년 러시아 제2의 규모였던 유코스석유회사 인수, 2003년
러 정부에 의해 탈세 및 사기혐의로 재판·복역 중에 2013년 사면으로 석방된
후, 러시아를 떠나 런던 등지에 거주 /끝/

별첨: 개황

별첨: 러시아 개황

<< 러시아 개요>>

1. 일반사항

- 국명 : 러시아 연방(Russian Federation)
- 수도 : 모스크바(Moscow, 1,268만명)
- 인구 : 1억 4,275만명('22/IMF)
- 면적 : 1,709만㎢(한반도의 78배, 미국의 1.8배)
- 주요언어 : 러시아어
- 종교 : 러시아정교, 이슬람교, 유대교, 가톨릭교 등

2. 정치현황

- 국가형태 : 공화국연방
- '91.12.25, 소연방 해체와 러시아연방 성립
-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임기 6년, 중임 가능)
- 의회구성 : 상.하 양원제
 - 상원(Federation Council) : 170명(연방주체별 각2명)
 - ※ 상원의장 : 마트비옌코(Valentina Matviyenko)
 - 하원(State Duma) : 450명
 - ※ 하원의장 : 볼로딘(Vyacheslav Volodin)
- 정부 주요인사
 - 대 통 령 : 푸틴(Vladimir Putin)



- 총 리 :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 외교장관 : 라브로프(Sergey Lavrov)

3. 경제현황 ('22.-IMF, '21.-EIU)

- GDP(IMF) : 1조 7,785억불
- 1인당 GDP(IMF) : 14,665불
- 경제성장률(IMF) : -2.2%
- 물가상승률(IMF) : 13.8%
- 실업률(IMF) : 4.0%
- 교역규모(EIU) : 7,690.93억불
 - 수출 : 4,729.29억불 / - 수입 : 2,961.64억불
- 대외채무(EIU) : 4,802.8억불
- 외환보유고(EIU) : 6,650.93억불
- 화폐단위 : 루블(Ruble) / (U S \$1≒74.29루블)
- 주요자원('21, BP)(매장량, 세계순위) : 석유(1,078억배럴, 6위),
- 가스(37.4조m³, 1위), 석탄(1,621억톤, 2위), 금(6,800톤, 2위)

/USGS), 우라늄(486천톤U, 4위/WNA) 등

4. 최근 주요 정세

- 푸틴 집권 1기('00.3-'04.5)(득표율 53.4%)/푸틴 집권 2기('04.5-'08.5)(71.9%)
- 메드베데프 대통령 집권('08.5-'12.5)(71.2%)/푸틴 집권 3기('12.5-'18.5)(63.6%)
- '16.9월 제7대 총선결과, 집권 여당 '통합러시아당', 54.2% 득표, 개헌 정족수(의

석2/3) 이상인 343석 확보

- 푸틴 집권 4기('18.5-)
 - '18.3월 푸틴 대통령 당선(76.7%), 5.7. 취임
- '20.7월 헌법 개정(푸틴대통령 2036년까지 대선을 통해 재임가능)
- '21.9월 제8대 총선결과, 집권 여당 '통합러시아당', 49.8% 득표, 개헌 정족수(의석2/3) 이상인 324석 확보

5.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 수립 : 1990.9.30.
- 공관설치 : '90.10월 주소련대사관 개설
- 주한공관 설치 : '90.12월 주한소련대사관 개설
- 교역규모('22, KITA) : 211.3억불
 - 수출 : 63.3억불 / - 수입 : 148.1억불
- 對러 투자(~'22.3분기까지 누계, 신고액 기준) : 41.51억불
- 對한 투자(~'22.4분기까지 누계, 신고액 기준) : 2.37억불
- 고려인('20) : 163,684명
- 재외국민('20) : 4,842명
- 인적교류 현황(상호방문객수)
 - '16년 41.9만명 → '17년 55.2만명 → '18년 69.5만명
 - '19년 80.4만명 → '20년 11.7만명 → '21년 5.1만명
 - ※ '14.1월 한-러 사증면제협정 발효



<<러시아 일반현황>>

1. 정치

가. 정치체제구조

- 러시아는 헌법상 대통령이 국가의 최고권력자이며 군통수권자이다. 헌법 규정상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권력 분산을 명기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발휘 하에 국정이 운영되는 연방공화국이다.
- 행정부는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하원 승인)와 총리추천에 의한 장관 등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연방법과 국가정책을 관리하고 집행하며 헌법이나 연방법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을 내릴 수 있다.
- 입법부는 450명의 두마(Duma:하원)와 170명의 연방평의회(Federal Council:상원)로 구성된 양원제로 구성된다. 상원은 연방법 채택, 전쟁선포와 조약·예산을 승인하며 대통령 탄핵 권한을 갖고 있고, 하원은 총리 임명동의, 사면 승인, 법안제출, 대통령탄핵발의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 사법부는 대법원, 하급 연방법원, 헌법재판소 등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의 제청으로 상원에 의해 판사가 임명된다.

나. 정치운영

1) 푸틴대통령 선출제한 철폐

푸틴대통령은 2000년 직접선거에 의해 당선된 이래 러시아국정을 이끌어 왔으며, 현재 대통령으로 4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푸틴은 1999년 및 2008년



부터 2012년까지 총리로 재직했다. 푸틴대통령의 현재 임기는 2024년에 만료가 되는 것이었지만, 2020년의 헌법 개정으로 푸틴 대통령의 경우, 연2회 즉 최대한 2036년까지 대통령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즉 6년 임기를 2회 재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헌법개정으로 대통령은 입법부의 법안을 거부할 수 있고 헌법 재판소 및 대법관을 해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2) 고위인사인선

푸틴대통령은 러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로 알려져 있지만, 본인 단독으로 국정을 운영하지는 않는다. 그는 정보와 안보관련 부처 장관, 고위 공무원단, 전략적 국영기업대표, 경제계 지도자 등의 보좌와 회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통치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정치관례상 공식적인 직함이 반드시 해당인사의 영향력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대통령실 인사들 예컨대 대통령실의 부실장·보좌관이나, 국영기업대표는 정부 각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푸틴 대통령은 구소련시기 정부기관(KGB)이나 90년대초 상트페테르부르크시에서 자신과 함께 일했던 인사들을 배치한 바 있었다. 푸틴과의 긴밀한 관계에서 현재도 여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방산회사(Rostec) 대표 체메조프, 석유회사(Rosneft)대표인 세친, 안보실장인 파트르췌프 등이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러시아의 고위인사 인선상에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째로는 푸틴과 과거 오랜 친분을 가졌던 인사들의 정치적 영향이 점진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부터 푸틴 대통령과 오랜 관계를 유지했던 몇몇 고위 관리들은 은퇴했다. 또한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오랜 관계를 가져왔던 체메조프(Chemezov)나 세친(Sechin)대표도 이전보다 영향력이 적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둘째로는 푸틴 대통령보다 10년 이상 젊은 테크노크라트 관리들의 등장이다.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 외에 최근 경향으로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총리는 연방 국세청장을 역임했다가 2020년 1월 발탁되었고, 지니체프 긴급사태장관은 10여 년간 대통령경호실에서 근무했으며, 안톤 바이노(Anton Vaino) 대



통령 행정실장(외교부출신), 키리렌코(Sergei Kiriyenko) 대통령실 부실장(Rosatom회장,총리역임), 나비울리나(Elvira Nabiullina)중앙은행장이 등장하였다. 2020년 1월 정부 개편에서는 더 많은 젊은 각료들이 임명되었는데 각료 중 75%(8명 중 6명)가 임명 당시 45세 이하, 9명의 부총리 중 5명이 55세 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정보 및 국방안보 출신 인사들이 국정운영을 주도하고 테크노크라트 출신들은 정책 이행 역할에 치중하고 있다.

다. 러시아 정치에 대한 국내여론

러시아 정치제도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여론은 사회적 질서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대다수 러시아인들은 현 정치체제운영이 아직 비민주적이라고 알고 비판의식을 갖고 있지만 경제적·정치적 안정을 위한 기회비용으로써 수용하고 차후 민주주의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인들은 2000년~2010년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질서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70%가 질서를 15%가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반응하였다.

2. 경제

가. 주요 특징과 추세

1) 러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화석 에너지의 생산과 수출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다. 러시아의 경제력은 2020년 구매력지수(PPP) 기준으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를 차지한다. 러시아의 인구는 1억4천5백여 만 명에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양정책으로 대처해오고 있다.

2) 러시아는 오랫동안 큰 영토 및 인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 규모의 국가였다.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경제규모, 2021년 세계 총 생산량의 1.7%를 차지했으며, 글로벌 가치 사슬에 약하게 통합된 상태 유지하고 있다.

3) 정부의 수출품목다변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은 석유



와 천연가스가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은 러시아의 총 상품 수출액 절반 가치 이상이며, 정부의 예산 수입의 40%를 차지해 왔다. 또한 러시아는 철과 강철, 알루미늄을 포함한 많은 금속 및 광물의 중요한 생산국으로서 백금, 팔라듐, 니켈, 금 및 보석을 수출한다. 러시아는 방산분야에서 주요 무기 수출국이다. 비록 러시아의 농업 부문은 상대적으로 액수는 작지만 보리, 밀, 옥수수의 주요 생산·수출국이다.

4) 세계 경제관계에 있어서 러시아는 주요 에너지 및 곡물 생산국 및 수출국으로서의 중요성을 갖으며 무역은 러시아 경제에도 중요하다.

- 러시아의 상품 무역규모는 최근 몇 년 동안 GDP의 약 40%를 차지(미국은 20%)하고 있다.
- 수출액은 2021년 총 4,920억 달러로 2020년 대비 46% 증가했다. 이중 석유 및 가스를 포함한 광물이 수출의 45%를 차지했다.
- 러시아의 수출지역은 지리적으로 집중되었다. 2021년 최다 수출 목적지는 유럽 연합(주로 네덜란드와 독일), 중국, 터키 순이었다. 한편 미국으로의 러시아 수출은 4%에 머물러 있었고, 지난 몇 년 동안, 중국과 아시아국들이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도입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었다. 이는 2014년 크림병합과 2022년 전쟁에 따라 부과된 제재로 노르드스트림 2 가스 프로젝트 중단과 우크라이나 경유 파이프라인의 이용 축소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 2021년도 상품수입은 2021년에 27% 증가한 2,940억 달러를 기록했다. 러시아의 주요 수입품은 산업 기계, 전기 기계 및 장비(30%차지), 차량 및 부품, 제약제품 및 플라스틱 등이 차지한다. 또한 러시아의 상품 주요 수입국은 유럽연합, 중국과 미국의 순위이었다.
- 한편 서비스 무역에서 2019년 러시아는 세계 27위 수출국(630억 달러), 16위 수입국(990억 달러)이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서방의 제재로 인해 중국과 인도가 가장 중요한 교역국이 되었다

나. 주요 경제지표

1) 경제성장률



러시아는 경제성장면에서 큰폭의 등락을 거쳤다. 러시아 출범 직후 처음 7년(1992-1998)동안 러시아는 매년 평균 마이너스성장률 6%를 경험했다. 그 후 2008년까지 평균 6.9%의 고도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주된 이유는 국제 유가상승과 푸틴대통령의 강력한 정치경제안정에서 기인하였고 이는 러시아 국민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그 이후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러시아는 급격한 경제 수축(마이너스 7.8%)했다가 반등했지만 높은 성장세를 보이지는 못했다.

2014 년 러시아경제는 다시 유가하락과 크림반도병합으로 인한 국제제재로 인해 2015년 마이너스 2%로 수축 후 반등했으나 2%이하 성장율을 기록해 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및 유가 급락, 지정학적 요인으로 마이너스 성장(-3.1%)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백신(SputnikV 등) 개발 및 접종 확대, 점진적 원유 생산량 증대 등에 따라 회복하였다.

러시아경제는 2022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개시로 인해, 서방의 포괄적 제재와 국제투자회수 등이 발생하여 2022년은 마이너스 2.2~2.5%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예상보다는 복원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 러시아 실질 경제성장률(GDP) 추이(러 중앙은행, 통계청)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8%	0.7%	-2.0%	0.2%	1.8%	2.5%	2.2%	-2.7%	4.7%

※ 세계 GDP 순위(2020년, IMF)

- 명목 GDP : 한국 10위(1조 5,868억 달러), 러시아 11위(1조 4,641억 달러)
- 1인당 GDP : 한국(30,644달러), 러시아 (9,972달러)

2) 교역

2020년도 대외 무역액은 총 5,719억 달러로 2019년 대비 15.2% 감소(수출 : 3,382억 달러, 수입 : 2,337억 달러, 무역 흑자 : 1,045억 달러)

- 2020년 교역액 감소는 석유·석유제품·가스 등 저유가에 따른 수출 감소에 기인

※ 러 교역규모 및 흑자액(억 달러)

- ('17) 5,887/1,309, ('18) 6,926/2,109, ('19) 6,743/1,784, ('20) 5,719/1,045

3) 외환보유고 : 2021년 2월말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5,863억 달러로 세계 제4위 수준

※ 주요국 외환보유액(2021년 2월말)

- 1위 : 중국(3조 2,050억 달러), 2위 : 일본(1조 3,794억 달러), 3위 : 스위스(1조 749억 달러), 8위 : 한국(4,476억 달러)

3. 2022년 특별군사작전 이후 경제상황과 2023년 전망

가. 2022년 경제 상황

1) 부정적 영향

- 2022년도 러시아의 실질 GDP는 러·우 사태 등의 여파로 전년 대비 2.5% 가량 감소(러시아 중앙은행 잠정치)
- 대외무역 및 국제 금융거래에 대한 서방의 광범위한 제재 및 통제조치로 인해 생산·공급망 및 대외 결제 등에 차질 발생
 - 이에 따라 '22년도 2분기부터 경제활동에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적으로 파급되면서 국내외 소비 수요가 급격히 위축
 - * 대내외 소비를 반영하는 관련 지표가 '22년 모두 감소
 - 전년대비, 가계소비(-1.8%) · 소매판매(-6.7%) · 도매판매(-14.5%) · 화물 운송(-2.6%) 감소
 - 소비 수요 위축 및 생산·공급망 차질로 인해 수출 및 중간재 수입의존 업종을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 감소
 - * 제조업 생산(전년 대비, %) :
('22.1/4) 4.9, (2/4) -3.9, (3/4) -1.8, (4/4) -3.4, (연간) -1.3

2) 그러나, 러·우 전쟁으로 인한 '22년도 러시아 경제의 충격은 당초 예상보다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 러·우 전쟁 초기 대다수 주요 기관들은 러시아의 '22년도 실질 GDP가 전년 대비 10% 이상 큰 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는 '21년도에 전년 대비 5.6% 성장하였으며 '22년도는 -2.5%(러



측기관발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주요 거시 경제 지표 (전년(동기) 대비, %, 러 통계청/경제개발부)

구 분	2019	2020	2021	2022				
				연간	1/4	2/4	3/4	4/4
실질 GDP	2.2	-2.7	5.6	-2.5	3.5	-4.1	-3.7	-4.6
소매판매	1.9	-3.2	7.8	-6.7	3.5	-9.8	-9.4	-9.5
고정자본투자	2.1	-0.1	8.6	5.5	12.8	4.1	3.1	-
산업생산	3.4	-2.1	6.3	-0.6	5.1	-2.6	-1.2	-3.0
- (광업)	3.4	-6.5	4.2	0.8	7.4	-1.1	0.1	-2.5
- (제조업)	3.6	1.3	7.4	-1.3	4.9	-3.9	-1.8	-3.4
건설	2.1	2.1	7.0	5.2	4.5	3.5	5.2	6.9
농업	4.3	1.3	-0.4	10.2	5.4	8.4	12.7	9.0

1) 물가 및 금리

가) '22년도 러시아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말 대비 11.9% 상승하였으나 러시아 중앙은행 전망(12~13%)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 전년 평균 대비로는 13.8% 상승(러 중앙은행은 13.7~13.9% 당초 예상)

- 식료품 물가는 전년도 말 대비 10.3% 상승
- 비식료품 물가는 전년도 말 대비 12.7% 상승
- 서비스 물가는 전년도 말 대비 13.2% 상승

* 여행(70.7%), 보험(28.2%), 여객운송(10.7%), 의료(11.7%) 등

나) 제재 및 물류 제약으로 인해 일부 수입품 등 가격은 상승하였으나, 농업 생산 증가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했다.

- 건설 및 농업 부문에서는 정부 지원* 및 곡물 수확량 증대로 각각 전년 대비 각각 5.2% 및 10.2% 생산 증가했다.

- 정부는 주택건설·주택담보 대출 이자부담 등 지원
- 곡물 수확량(백만 톤) : ('20) 133.5, ('21) 121.4, ('22) 153.8
- 건설 투자 등 증가로 고정자본투자는 전년대비 5.5% 증가

* 한편, 러 정부의 안보·국방 관련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지출이 증

가하여 고정자본투자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러·우 전쟁 직후 급격히 악화된 루블 환율이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으로 신속히 안정되면서 물가 상승률 둔화에 기여했다.
- * 러시아 외환시장(MOEX)에서 러·우 사태 이전 달러당 70루블 대였던 루블 환율은 '22.3월 120루블까지 상승한 이후 5월~11월 50~60루블대로 하락(12월부터 상승세)

다) 러 중앙은행은 러·우 사태 직후 환율 불안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연 9.5%에서 20%로 대폭 인상했다.('22.2.29)

- 이후 물가상승률이 둔화되자 경기 진작을 위해 4월부터 9월 까지 6차례에 걸쳐 7.5%까지 인하하여 동일 수준 지속 유지 중이다.
- * 기준금리 변경 추이 : ('22.2.29) 20.0% → (4.8) 17.0% → (4.29)14% → (5.26) 11% → (6.10) 9.5% → (7.22) 8% → (9.16) 7.5% (전년도 말 대비, %, 러 통계청)

구 분	2019	2020	2021	2022					
				연간	1/4	2/4	3/4	4/4	전년 평균 대비
소비자물가	3.0	4.9	8.4	11.9	10.0	11.4	10.5	11.9	13.8
식료품	2.6	6.7	10.6	10.3	10.0	12.5	8.9	10.3	14.9
비식료품	3.0	4.8	8.6	12.7	12.9	12.9	12.5	12.7	15.2
서비스	3.8	2.7	5.0	13.2	6.0	7.7	9.8	13.2	10.1

2) 고용 및 임금·소득

가) '22년도 러시아의 실업률은 월평균 3.9%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 외국기업 철수·조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부분 동원령('22.9.21.)에 따른 노동력 공급 부족 현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실질 임금 및 실질 가처분 소득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이 1% 수준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다.



- 예상보다 낮았던 물가 상승률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정부는 연금·최저생계비·최저임금 인상, 저소득 양육 가정(8-17세 자녀) 보조금 지급 등

구 분	2019	2020	2021	2022				
				연간	1/4	2/4	3/4	4/4
실업률(월평균, %)	4.6	5.8	4.8	3.9	4.2	4.0	3.8	3.7
실업자수(월평균, 백만명)	3.5	4.3	3.6	3.0	2.8	2.9	3.0	3.1
월평균 명목임금(루블)	47,867	51,344	57,224	61,985*	60,101	63,784	61,385	미공표
임금상승률(명목, %)	9.5	7.3	11.5	12.7*	15.0	10.6	12.2	
임금상승률(실질, %)	4.8	3.8	4.5	-1.1*	3.1	-5.4	-1.9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율 (전년(동기) 대비, %)	1.0	-2.8	3.2	-1.0	-1.6	-0.6	-3.1	0.9

* '22년도 연간 인금은 1~11월간 월평균(4분기 수치 현재 미공표) / 러 통
계청

3) 재정

가) '22년도 러시아 연방재정은 GDP 대비 2.3% 수준인 3.3조 루블 규모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 '21년도에는 0.5조 루블 흑자 기록(GDP 대비 0.4%)

** '22년 1~11월간 재정수지 흑자(0.6조 루블)였으나, 12월 급격한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12월 재정 적자(3.9조 루블 적자)로 인해 연간 기준 재정적자 시현

○ 재정 수입은 27.8조 루블로 전년 대비 10.0% 증가하였으며 연간 예산 대비로는 11.2% 초과 수입이 발생했다.

- 석유·가스 부문 수입은 11.6조 루블로 전년 대비 27.9% 증가 하였으며 연간 예산 대비로는 21.4% 초과 수입 발생

* 석유·가스 부문 수입은 연방재정 수입 중 41.6% 비중이며 '21년(35.8%) 보다 비중 확대

- 석유·가스 외 부문 세입은 16.2조 루블로 전년 수준으로(0.1% 증가) 연간 예산 대비로는 4.9% 초과 세입 발생

* 전체 연방 재정수입 중 58.4% 비중으로 '21년(62.3%) 보다 비중 감소

○ 재정 지출은 31.1조 루블로 전년 대비 25.7% 증가하였으며, 연간 예산 대비로는 31.4% 초과 지출이 발생했다.

-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외에도 안보·국방 관련 예산 집행이 연도말 증가한 것으로 추정

(조 루블,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
				예산(A)	집행(B)		
					(잠정치)	B-A	
○ 세입	20.2	18.7	25.3	25.0	27.8	2.8	26.1
- 석유·가스 부문	7.9	5.2	9.1	9.5	11.6	2.0	8.9
- 석유·가스 외 부문	12.3	13.5	16.2	15.5	16.2	0.8	17.2
○ 세출	18.2	22.8	24.8	23.7	31.1	7.4	29.1
○ 수지	2.0	-4.1	0.5	1.3	-3.3	-	-2.9

%)

4) 교역 등 대외 부문

가) '22년도 러시아의 상품·서비스 수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수입 감소로 2,8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 러시아 관세청이 발표해온 무역수지 통계는 러-우 전쟁 이후 대외 공표 중단

○ 연간 상품·서비스 수출액(6,281억 달러)은 전년 대비 14.2% 증가

* 역대 최고치('13년도 5,920억 달러) 갱신

○ 연간 상품·서비스 수입(3,458억달러)은 전년 대비 9% 감소

※ 다만, 수출액이 점차 감소하고 수입액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따라 분기별 흑자 규모가 점차 축소되는 추세

(10억 달러,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연간	1/4	2/4	3/4	4/4 ^e
상품·서비스 수지	129.4	76.7	170.1	282.3	79.1	91.8	65.6	45.9
- 수출	481.7	381.5	550.0	628.1	168.2	163.2	152.0	144.7
- 수입	352.3	304.8	379.9	345.8	89.1	71.4	86.5	98.9



- 2022년도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는 2,274억 달러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으며, 상품·서비스 수지 흑자는 2,824억 달러(전년 대비 66% ↑), 소득수지 적자는 △549억 달러(전년 대비 15% ↓)이다.(1.17, 러시아 중앙은행 잠정 집계)

[2022년도 러시아 경상수지 결과]

(단위 : 억 달러)

구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률
경상수지	1,222	2,274	86%
상품서비스수지	1,701	2,824	66%
소득수지	-479	-549	-15%

- 2022년도 러시아의 수입은 주로 유럽으로부터의 수입 감소 영향으로 물량 기준 16% 감소했으며, 러시아의 주요 교역 상대국은 중국(2021년 대비 28% ↑), 튀르키예(84% ↑), 벨라루스(10% ↑), 네덜란드(0.1% ↓), 독일(23% ↓) 등이다.

※ 2022년 한·러 간 교역 규모는 211.4억불로 2021년 대비 22.7% 감소함
(한국의 대러 수출 36.6% 감소, 수입은 14.7% 감소)(무역협회 통계)

5) 원유수출

가) 러산 원유 가격의 할인 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국제 유가 상승* 및 수출선 다변화로** 석유 수출액이 증가했다.***

* 국제유가 추이(연평균, \$/배럴)

· 브렌트유 : ('20) 43.21, ('21) 70.95, ('22) 99.04

· 우랄유 : ('20) 41.73, ('21) 69.00, ('22) 76.09 / '22년 평균 23% 가량 할인

** 기존 EU·미국·영국·일본·한국으로의 석유 수출 감소분에 대해 인도·중국·터키 등으로 수출 확대 추진

*** IEA에 따르면 러시아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은 '22년 상반기 월평균 200억 달러, 하반기 월평균 163억 달러 수준('21년은 월평균 150억 달러 수준)

○ 석유 수출액 증가와 생산·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수입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가 2,274억불로 전년 대비 1.9배 증가(역대 최대 규모)했다.

-2020년 354억불, 2021년 1,223억불대비

나) 한편, 3분기부터 국제유가 하락 추세 및 병행수입 허용을 통한 수입 회복세로 경상수지 흑자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 '22년 분기별 경상수지 흑자(억 달러): (1/4) 695, (2/4) 785, (3/4) 480, (4/4^e) 314

○ 특히, 러산 원유에 대한 EU의 금수 조치 및 G7 등의 유가 상한제 시행('22.12.5.) 전후로 석유 수출액은 급감 추세(IEA)이다.

* 석유 수출액(억 달러): (10월) 173, (11월) 158, (12월) 126

○ 이에 따라 러시아 중앙정부 재정 수입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3.1월 석유·가스 부문으로부터의 재정 수입 급감(전년 동월대비 -46.4%, 러 재무부)

6) 환율

가) 2022년초 루블화 환율은 외화 유입 감소 및 EU 추가 제재조치 계획으로

약세를 보였다.

○ 러시아산 원유에 이어 석유제품에 대한 서방의 가격 상한제 도입(2.5), EU의 엠바고 시행(2.5)에 따른 수출 감소로 인해 외화 유입이 감소하였다

○ EU의 제10차 대러 제재 발표 계획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했다.

○ 러 중앙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글로벌 달러 강세 실현, 루블화 시중 유동성 과다 등 영향으로 인해, 주요 외화 대비 루블화 가치는 2023년초 계속 하락했다.



러시아 외환시장		'22년 2.24(목)	3.9 (수)	6.20(월)	12.28(수)	'23년 1.12(목)	2.17(금) 9:00
환율 (전일 대비)	루블/달러	85.11 (5.8% ↑)	120.0 (14.3% ↑)	53.40 (5.3% ↓)	72.19 (2.5% ↑)	67.76 (1.4% ↓)	75.14 (0.4% ↑)
	루블/유로	95.50 (5.0% ↑)	127.00 (6.7% ↑)	56.07 (4.7% ↓)	76.40 (1.9% ↑)	73.15 (1.2% ↓)	79.90 (0.1% ↓)
	루블/위안	15.34 (19.7% ↑)	21.4 (6.9% ↑)	8.44 (0%)	10.25 (2.7% ↑)	10.02 (0.5% ↓)	10.91 (0.3% ↑)

나) 그러나, '22년 전체적으로 평균 루블화환율은 초반기에 비교, 수출입 불균형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확대, 러 정부·중앙은행의 외환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주요 통화 대비 절상되었다.

* 은행의 외화 매도 제한, 외화예금 현금 인출 제한, 해외송금 한도 제한 등

○ 러 중앙은행 고시환율 기준, 달러 대비 연평균 67.46루블로 전년평균 대비(73.65루블) 8.4% 절상(전년도말 대비로는 18.3% 절상)을 기록했다.

- 유로화 대비로는 연평균 70.86루블로 전년평균 대비(87.16루블) 18.7% 절상(전년도말 대비로는 31.4% 절상)

※ 다만, 금융 제재 등에 대응한 강력한 자본유출 통제에 따른 루블화 절상이 환율 불안에 따른 금융위기로의 전이를 차단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러시아 경제의 근본적인 기초기반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다. 향후 전망

1) 주요 경제 기관들은 2023년초 현재 예측에 따르면, 2023년기간중 러시아 경제가 점진적 회복 과정을 거쳐 '24년경에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회복여부 및 속도는 유가변동에 따라 크게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 '23년 러시아 실질 GDP 증가율 전망(전년 대비) : 러 중앙은행('23.2.10) -1.0~1.0%, IMF('23.1.30.) 0.3%, World Bank('23.1.10.) -3.3%

○ 특히, 최근 IMF와 러 중앙은행은 기존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금년도 러시아 경제의 소폭 성장 가능성을 전망했다.**

* IMF : ('22.10.11) -2.3% → ('23.1.30) 0.3%

러 중앙은행 : ('22.10.28) -4~-1% → ('23.2.10) -1.0~1.0%

** 러 중앙은행 총재(Elvira Nabiullina)는 기존 전망 이후에 확대된 재정 지출 상황을 감안하여 금년도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2) '23년도 러시아의 물가 상승률은 전년도 기저효과, 국제 에너지 상품 가격 하락 추세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러 중앙은행은 '23년도 물가 상승률이 '22년도 말 대비 5.0~7.0%('22년 평균 대비 4.0~5.3%)를 기록하고 '24년에 목표 수준인 4%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다만, 동원령에 따른 노동 공급 손실로 인한 생산 제약,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 등은 향후 물가 상승 가중 요인으로 상존

3) 대외 부문의 경우, 석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향후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랄유 가격 전망(연평균, \$/배럴, 러 중앙은행) : ('22) 76, ('23) 55, ('24) 55, ('25) 55

** 경상수지 흑자 전망(십억 달러, 러 중앙은행) : ('22) 227, ('23) 66, ('24) 48, ('25) 41

○ 이에 따라, '22년도 주요 통화 대비 큰 폭으로 절상되었던 루블 환율은 점차 절하될 것으로 전망

○ 한편, 러산 원유 제재에 따른 급격한 우랄유 가격 하락*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금년 3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감축시킬 계획

* 우랄유 평균 수출가(\$/배럴): ('22.3월) 89.05, (6월) 87.30, (9월) 68.25, (12월) 50.47, ('23.1월) 49.48

4) 급격한 우랄유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경우에는 석유·가스 부문으로부터의 재정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 러 재무부는 '22.10월당시, 2023년도 재정 수입 예산 책정시 우랄유 가격을 배럴당 70.1달러로 가정하여 편성(상기 전제하에 '23년도 GDP 대비 2% 재정 적자 전망)



4. 대외 관계

가. 기본 방향

푸틴 대통령하 러시아는 역내 지배력과 국제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정부에 대한 국내 지지를 증가시키기 위해 다극질서 도래를 주장하면서 특히 2012년 이래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해 왔다. 러시아는 구소련 인접국가들에 대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발족 등으로 외교·경제적으로 유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군사개입을 감행했다. 즉, 2008년 조지아와의 전쟁, 2014년부터 시작된 크림반도병합과 돈바스 일부지역에서 내전 지원, 2015년 시리아 내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통해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해왔다.

특히 2022년 2월 러시아가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한 이래 러시아와 서방세계(특히 미국, 유럽연합, 나토)와의 관계는 붕괴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러시아는 반서방 기치 아래 중국과의 관계를 무제한의 파트너 관계로 격상시키고 이란과 전략적·경제적 협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중남미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나. 주요국과의 관계

(러-미 관계)

-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러·미 관계는 악화를 거듭하여 2022년 우크라이나침공으로 미·러 관계는 사실상 단절 상태에 있다
 -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도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 여파로 양국 관계가 지속 악화되었다.
 -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2020년 미 대선 개입 의혹, 솔라윈즈사 해킹, 야권 지도자 나발니 탄압건 등에 대한 미국의 연이은 대러 제재 발표와 러시아의 맞대응 조치로 관계가 경색되어 왔다
-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양국의 근본적 시각차, 미국의 대러 제재 지속, 상호 반감 등으로 미·러 관계는 바이든 행정부하에서는 회복하기 어렵다.
 - 2023년 2월 푸틴의 New Start(신 전략무기감축 협정) 이행중단 선언으로 군비통제나, 기후변화 대응 등 이익을 공유하는 분야에서도 제한적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건 하에 있다.

(러-EU 관계)

- 러시아와 EU는 NATO 동진, 유럽 미사일방어체제(MD) 배치, 2008년 러·조지아 전쟁 등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축적되어 오다,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 지역 병합을 기점으로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어 왔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EU관계는 거의 파탄상태에 있고 핀란드, 스웨덴의 나토가입 추진으로 러시아는 외교 안보상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 다만, 독일, 프랑스는 전후 관계유지 필요상 대러 대화 창구는 유지하고 있으며, 헝가리는 대러 의존도로 인해 제재 등에 있어서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 2021년 나발니 사건 등 인권문제를 이유로 한 EU의 제재 발표, 동유럽·발트국가들의 제재 동참에 더해 러시아의 외교관 맞추방 등 보복조치가 이어지면서, 러·EU 관계는 경색이 심화되어 왔다

(러-중 관계)

- 러·중 양국은 밀월관계를 유지·발전 중이며, 국제·지역 현안 관련 다자외교무대와 정보전 차원에서 긴밀히 공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미국의 공세에 대한 대응·공조 필요성 등 기반 하에 외교·군사·경제 등 제반 영역에서 양국의 협력이 확대되는 추세 하에 2022년 2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무제한의 파트너관계라고 외교수사적으로 격상시켰다.
- ※ 푸틴 대통령은 2023년 3월 시진핑주석의 러시아방문을 계기로 러·중관계가 유례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평가했다.

(러-일 관계)

- 아베 전 총리 재임시 정상간 교류를 바탕으로 영토문제 진전 도모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인 바 있으나, 가시적 관계 진전은 얻지 못하였다. 스가 총리 취임(20년 9월)이나 특히 기시다 총리 하에서는 G-7 차원에서 대러 제재동참으로 양국 간 교류는 정체되어 있다.



5. 국방

가. 러시아 국방력 개요

러시아군은 지상군, 해군, 항공우주군으로 나뉘며, 또한 두 개의 독립된 전략 미사일 부대와 공수부대로 구성된다. 2021년 현재 군에는 세계 5위 규모인 100만 명 안팎의 현역 병력과 200만~2,000만 명의 예비역 병력이 있다. 18세에서 27세 사이의 모든 남성 시민은 의무적으로 1년 동안 군대에 복무해야 한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으며, 세계 핵무기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탄도미사일 잠수함중 두 번째로 큰 함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략폭격기를 운용하는 3개국 중 하나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 말 현재 러시아의 평시 총병력편성은 약 95만명이며 100만명 수준으로 증가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계약직 군인 40만 5천명, 징집병(12개월 복무) 22만 5천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군소속별로 분류하면 지상군은 28만, 공군 16만 5천, 해군 16만, 전략미사일군 5만, 공수군 4만 5천, 특수신속군 2만과 징집병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예산 규모

연간 국방예산은 600억 내지 650억불로 GDP 대비 4%이고 PPT(실질구매력) 반영시 더 큰 규모가 된다. 러시아는 2011년부터 10년 단위 국가국방계획을 수립하여 군현대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중 2011년도 수립 10년 계획에 따르면 현대식무기도입에 예산의 70%를 투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2020년에 617억 달러를 지출하여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2021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무기 수출국이 되었고, 대부분의 자체 군사장비를 생산하는 거대한 무기 산업을 가지고 있다. /끝/